

제315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29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 가. 환경부 소관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
 - 나. 고용노동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대안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편성한 추경은 세입결손에 대한 보전이 12조 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확대 차원에서 편성된 것도 5조 3000억 원 정도의 사업인데, 그것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정부 전체 세출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내일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

(10시19분)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 보전 12조 원, 세출확대 5조 3000억 원 등 총 17조 3000억 원 규모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자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환경기초 시설의 조기 완공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에 2842억 원, 둘째 중소 환경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산업육성용자, 재활용산업육성용자에 360억 원, 셋째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석면관리종합대책,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등 4개 사업에 139억 원 등 총 14개 사업에 3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조사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지자체 집행실태 점검과 독려 등을 통해 예산이 연내에 전액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도 제고하고 환경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새로 보직을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이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3년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부 일반현황, 2013년도 환경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의 환경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쪽의 2013년도 환경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개 사업 3341억 원으로, 첫째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 2842억 원을, 둘째 중소 환경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에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산업육성용자와 재활용산업육성용자 사업에 360억 원, 셋째 화학사고 사전예방,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면관리종합대책,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등 4개 사업에 139억 원입니다.

10쪽의 2013년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2013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985억 원, 6.4%가 증액된 4조 9523억 원입니다.

자체세입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985억 원이 추가 전입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13년 세출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341억 원 증액한 5조 5547억 원입니다.

유형별로 볼 때 사업비 33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기본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환특 2985억 원, 농특회계 3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부문별로는 상하수도 7.7%와 수질 10.9% 그리고 환경보건 분야 17.8%가 증액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세부현황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1903억 원, 물환경 분야 939억 원, 그리고 환경보건 분야 1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마지막으로 사업별 세부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세부사업명별로 보면 먼단위 하수처리장 3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942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247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100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58억 원,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 314억 원, 아산탕정(7단계)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에 300억 원,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에 3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서 추진율이 높거나 향후 추진 가능성이 높은 139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조기 완공과 기간을 당겨서 적기 완공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28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재활용산업육성용자에 200억 원, 환경산업육성용자에 160억 원을 반영해서 영세 중소기업자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으로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21억 원, 석면관리종합대책에 48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50억 원, 생활공해 관리에 20억 원을 반영해서 특히 화학사고 대응 특수차량 추가 보급과 슬레이트지붕 철거물량 5000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석면뿜칠 제거, 환경개선공사 1개 역에, 그리고 층간소음 방문서비스 5대 광역시로 확대하기 위해 10억 원과 2개의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검토한 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85%를 차지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및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8개의 하·폐수처리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율이 높은 세부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라는 국정감사와 결산심사 시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지적되어 왔고 또한 연초임을 감안하더라도 3월 말 현재까지도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의 편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행률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사업은 화학사고 시 운용할 특수차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1억 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 특수차량을 처음 도입할 당시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예산 사업 2대분과 함께 연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차량을 운용할 전문인력 확보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면관리종합대책 사업은 추경예산안에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사업대상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임을 고려하여 고령자 및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개량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슬레이트 건물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은 2012년도에 종료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과 연계하여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용담역의 석면뿜칠을 제거하고 역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공해관리사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시별 소음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 중 도시별 소음지도 작성과 관련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첫 번째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부장관께서 법사위 심사를 위해서 급히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정에 위원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서 제가 봤던 기억에 따르면 지금 상수도시설 보급과 관련해서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는 상수도 부분이 보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길게 2018년까지 어쨌든 80%까지 보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농어촌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도 상수도과 관련한 부분은 전혀 없고 하수도 쪽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물론 하수와 관련한 물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물과 관련된 된 부분에 있어서의 조기, 2018년에 80%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쨌든 2018년까지는 전체 100% 정도의 모든 농어촌에 계신 분들에게도 깨끗한 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다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상수도 부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80%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보급사업 자체가 기재부장관이 관리 운영하는 광특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정은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시도가 해당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기재부에서 추경 편성을 하면서 광특회계 사업은 좀 제외하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 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라도 이렇게 전체 적인 계획을 짤 때 물론 광특회계이기는 하지만 좀 균등하게, 특히나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도시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여러 가지 편의성의 차 원에서 상대적인 박탈을 느끼시는 것이 많습 니다.

그래서 특히나 깨끗한 물과 관련되어서는 여전 히 확보가 안 되어서 우물물에 의존하고 있는 분 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경부 차원 에서는 조금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계획을 앞으로 당기고 그 광특회계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적극 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김성태 위원 질의합니 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차관님 이번 추경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실물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기 부양에도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러기 위 해서는 중앙정부의 국비가 단순히 지방에 이렇게 내려진 것만으로 집행률을 판단할 게 아니라 국 비와 지방비가 실제 사업에 제대로 사용됐는가를 기준으로 집행률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정부 측 집행률만 가지 고도 안 되는 거고 지방에서 판단만 해도 안 된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번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계속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집행 률을 고민해서 편성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번에 저희들 추경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되 실질행위를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같은 경우에 우선되는 게 매칭 펀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지방 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올 해 17개 신규 사업의 경우 지금 2013년 1/4분기 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 되지 않고 있거든요. 2013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 업으로서 본예산에 실제 집행률이 낮은 사업임에 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다시 편성되어 있어요. 그 게 대표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추경예산액이 942억 원 중에 2013년에 새로 시작한 17개 사업에 대해서 237억 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김성태 위원 그러나 이 사업들은 2013년 1/4 분기 본예산으로 95억이 잡혀 있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지금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업들 에까지 굳이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집

행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은 설계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착공되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반기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서 반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사업 그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차관님 말씀 백번 일리가 있습니다. 답변도 맞고요. 그렇지만 공사가 착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설계가 완료되고 심지어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가령 전북 장수군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는 2009년 11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고 작년 2012년도 11월 달에 공사가 발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차관님 지금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이런 것을 두루 고려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곳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소위 논의 과정이나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또 이번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47억이 추경에 편성되었지요? 그 주 사업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런 것을 개량하고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에 하천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그런 것과 더불어 시급한 것이 수도 서울에 설치된 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지방하고는 달리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만 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실생활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악취 발생이 이미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이것을 지하화사업을 통해서 위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계속되고 있

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국비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현재 환경부 입장에서는 정부재정 여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지역에 실제로 하수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도 국고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보면 25개구가 있는데 그 25개 구 중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나 용산 강동,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재정자립도가 30%대를 헤메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김성태 위원** 그런 것을 차별을 좀 뒤 가지고 효율적인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홍영표 위원 질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다른 분들 먼저……

○**위원장 신계륜** 그래요?

김상민 위원은 아직 안 나오셨고요…… 서용교 위원 질의합니다.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울의 서용교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난달에 기재부에 환경부에서 총 29가지 사업 신청을 하셨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28개……

○**서용교 위원** 지금 대체로 보면 14가지 사업에 규모는 한 절반 정도로 준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기존 사업을 연장시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급속하게 진행된 절차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중에 제가 지역경

제 활성화 부분 하나 좀 여쭙어 보고 싶은데 이게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 국정과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총 한 5개 중에 하나도 새롭게 신규 지정이 안 됐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재정당국에서는 기위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반영시킨 분야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면 어차피 재원 자체가 좀 제한돼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편성할 때에 지원이 시급하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예산을 작업할 때에, 2013년도 작업할 때에 사실 정부가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많이 반영을 못 시켜 주고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사업은 어느 정도 편성을 했고, 내년도 사업에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서용교 위원** 국정과제 선정을 할 때 대체로 시급성이라든지 작년 대통령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주가?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대체로 바로 본 사업을 하기보다는 연구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추정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먼저 진행을 해 놔야, 이후의 사업 과정들을 염두에 둔다면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또 이번 추정 목표 중에 중소 수출기업 및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부가 그동안 뭐라고 그럴까요, 집행률이 가장 높은 사업들 중의 하나가 재활용산업육성융자금, 환경산업육성융자금, 환경개선자금융자금, 이 사업들이 가장 집행률이 높았던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이나 관계자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규모 삭감된 것 같은데, 작년 실적을 보면 용자 예산들이 이제 가지 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다 조기에 마감된 사업들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 신청한 금액 중에 360억만 반영이 되어 있던데, 처음에 신청을 한 310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맞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재정당국에서 그냥……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가장 선호도도 높고 집행도 잘되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재정여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보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게 지금 적절한 규모가 이번 추정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본래 중소기업하고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할 때는 정부는 한 3100억 원 주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이렇게 처음에 판단을 했었어요,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부 재원 규모상 도저히 그 정도 규모는 반영을 못 시켜 주기 때문에 대폭 삭감된 그런 사안이거든요.

○**서용교 위원** 그리고 이제 민생안정 관련 사업 예산 중에 석면관리종합대책이 있던데, 이게 전부 다 철거비용하고 처리비용들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개량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 감당…… 이게 물론 276억 증액 요청했다 48억만 결정이 됐지만 이것도 감당하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상적인 방법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량사업도 같이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차라리 이번에 편성할 때 개량비 부분 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취약계층, 아주 영세계층에 대해서는 개량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원했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석면 처리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주고 개량은 또 다른 차원에서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매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 대부분 재정당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환경부가 재정당국을 설득시킨 사업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저희들이 반 정도 잘렸지만 그래도 반 정도 반영시킨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서 사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용교 위원** 기존 해 오던 사업 외에 신규로 추가로 된 것들 중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신규사업은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서용교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앞두고 환경부가 새롭게 새 정부 출범하면서 뭘 했는지 제가 좀 물어보는 건데 신규로 된 사업들이 거의 없고, 장관도 취임하면서부터 환경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몇 가지 내건 공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환경부에서는 뭘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계속 여쭙어 보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재정당국이 편성할 때에 신규사업은 검토해서 주로 많이 제외하고 기존 사업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김경협 위원 질의합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당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환경재난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화학사고, 녹조, 기후변화 같은 환경재난이 계속, 그 위협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환경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대응하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대단히 뒤져 있

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나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장비 쪽 예산은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R&D 쪽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협 위원** R&D 쪽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번에 추경하면서 R&D 쪽은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좀 급한 사업 쪽에 대고 R&D 쪽은 반영을 못 해서 앞으로 환경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정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단계적 작업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아무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이 이제 어찌 됐든 처음에 추경을 제출할 때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 또는 민생 추경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별로 이것하고 관련이 없고 전반적으로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시직, 일회성 일자리 이런 것들만 계속 만들어 내는 예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었는데, 우리 환경부 산하기관들 중에서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것 저번에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김경협 위원** 여기와 관련된 대책, 금년에 어떤 대책이 좀 없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경협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대책을 요구를 했었는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서……

○**김경협 위원** 물론 단기간에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겁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차츰차츰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 추경에서 이 준비를 위한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아니면 다음번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시기마다 준비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적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자가 아니라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프로세스라도 제시가 됐으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 질의합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 앞서 질의가 공통된 점이 보입니다. 추경 목적인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비추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 특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런 것은 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돼 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서용교 위원이 굉장히 강조했듯이 저도 환경산업육성용자, 재활용산업육성용자 이쪽을 이미 예결위원으로 예결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환노위에서도 오히려 이 점을 의견으로 담아서 예결위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을 하면 더 좋지만 정 증액이 어렵다면 우리가 지적한 대로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쪽을 지금 기업이나, 예를 들면 환경산업육성용자는 금년 예산이 140억 원인데 하루 만에 신청이 160억 원입니다. 이런 것을 안 올리고, 지금 조금 올렸어요, 1540억 요구했는데 300억 반영됐어요, 추경에서. 이런 걸 제대로 올려야 되는데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지적받는 것 이런 것을 올려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재활용산업육성용자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지금 용자 예산 730억인데 신청액이 1100억 정도 된다고, 이미. 이런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환경산업 육성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 최대의 목표를 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 뭐 조기 완공 이런 것을 지금 들고 나와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국회 차원에서 저희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강조해 가지고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순수 증액이 쉽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환노위하고 예결위 협의를 해서 다른 것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높여야 된다, 이것을 위원장님 나중에 위원회 처리할 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사업도 집행 가능성을 볼 때는 저는 별로,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차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시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개선, 이게 이번의 국정과제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들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금년에 제도적으로 완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라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년 정도 제가 판단하는데 제도 도입을 위해서, 환경오염 피해보험, 보험이 핵심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완영 위원** 그러려면 시뮬레이션도 좀 해야

되고 업종별 환경 리스크도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조기에 실시할 수 있겠는가……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은 한 5억 정도 증액을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국정과제인 만큼……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환경부 내에서 내역 변경해서라도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이것 보니까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그런 추경 편성의 긴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해서 편성된 것이지만 환경부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번 추경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경제회복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일자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경이 편성되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환경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기존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다 어느 정도 저희들 목표 수질에 맞추어서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는데, 그 연도에 사실은 완성을 하려면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다 기존 사업이 되어서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우리 국가재정법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요건을 세 가지로 나

누고 있지요. 그런데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위원장 신계륜** 두 번째,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해당되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은 그렇게 좀,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력하고 민생안정 차원에서……

○**위원장 신계륜** 아무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무리 추경예산안이라도 편성의 시기가 너무나 급박하게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바람에 ‘이것을 제대로 검토했을까? 이렇게 국가 예산을 빨리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합니다.

은수미 위원 질의합니다.

○**은수미 위원** 민주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신계륜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의 편성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다는 환경부의 그동안의 말과 달리 사실은 주로 토목사업에,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MB정부의 판박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추경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차관님께서 민생안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은수미 위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장하나 의원이—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마는—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의안과 법률안이 상정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생안정과 민생보호를 위해서도 이분들에 대한 구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피해자 구제 예산을 19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생안정과

민생보호에 대한 예산이 단 한 건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는, 특히 이 가슴기 피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환경부의 사안인데도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뭘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저희들도 가슴기 살균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환경부가 구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구제 결의안하고 관련 법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제법안도 국회에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예산 편성은 이런 논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환경부가 관련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필요에 의해서 지금 주관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는 아마 장하나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실 것이라서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추경 중에 이런 토목 혹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석면관리종합대책이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석면특별관리역사만 봐도 사실은 23개 역 중 아직도 8개 역이 미개선 상태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예요. 따라서 8개 역사 모두에 대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에 관련된 예산으로 400억 원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할 합니다. 서울 역사는 같은 경우에 8개 못 했던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1개 지역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계획이 늦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다면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이것이, 올해 내에 이 대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추경이 되면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집행 자체가 또 연장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석면관리종합대책 중의 하나인데 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목표 물량의 5.7%만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리고 국회에서도 작년도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환경건설청업체의 농촌폐기물 관리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슬레이트지붕을 쓰는 농어촌 지역 주택 57만 호 중에 59.3%인 34만 호의 슬레이트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루가 흩날리게 되면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는 시급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지붕개량 지원비가 약 35억 원 정도 더 증액되는 것이 맞고, 이러한 환경복지 그다음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일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다면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관거 정비나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오히려 집행이 지연이 되어서 더 문제이지 돈이 모자라서 문제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라든가 석면 관리종합대책이라든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은 저는 증액을 하고 보완을 하고, 특히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3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 부분으로 좀 수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저희들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35억 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반영된 것들은 본래 처리 기한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반영이 못 되어서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단순히 토목사업이라기보다는 수질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좀 이런 사업은 그대로 가되, 추가로 좀 더 증액시켜주시는 데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수미 위원** 저로서는 추경 편성 방향 전체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주영순 위원 질의합니다.

○**朱永順 委員** 차관님이 오늘 처음 답변을 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차관 되셔 가지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朱永順 委員** 축하합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고맙습니다.

○**朱永順 委員**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량의 증가로 인하여 유독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존재는 하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일차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

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하지만 낙동강 수계에 있는 산단이나 공업지역에만 설치하다 보니 다른 수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천 오염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포함해서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2013년 1월 현재 한 70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중에서 4대강 수계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얼마나 되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701개소 단지 중에서 60.5%인 424개소가 4대강 수계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또 전국 배출업체 중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저희들이 2010년 말까지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라는 한 4만 8000여 개소 중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한 11.5%인 5500개 정도 됩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면 그중에서 산단 내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산단 내에는 한 2200개소가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처럼 산단과 공업지역은 하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고, 이들 업체는 특정 지역에만 분포된 것이 아닌 4대강 수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맞습니다. 사고도 골고루 지금……

○**朱永順 委員** 4대강의 수질 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4대강 수계에 있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낙동강을 제외한 한강이나 금강이나 영산강도 똑같이 공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 수계도 마찬가지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보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朱永順 委員**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실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정안 마련 후 다른 수계의 산단지역에도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차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에는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무소가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 1단계 사업지구 내여서 사무소 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1단계 철거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사무소 이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공사하는 지금 시기에 사무소 이전 예산이 반영되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증진과 변산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기라고 봅니다.

이번 추경안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이전 비용 13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朱永順 委員** 그러면 이번에 좀 반영이 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마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화학물질 전담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지자체에서 여수산단 내 종합방재센터 설치로 61억 원의 국비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이 화학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개선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조직 전반적인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장하는 것

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 기구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나온 말인데, 그 이후 지금 4개월이 거의 되었는데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무려 그동안에 25건이나 발생했거든요.

전담기관 구성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당연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朱永順 委員** 시급하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면 기본계획안이 나왔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전체적인 윤곽은 나왔습니다마는 성격이나 규모나 설치 방안을 자세하게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조직의 성격 검토를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선 안행부하고 조직 규모에 대하여 협의를 하면서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4개월이 걸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금년 연말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이것을 관심 가지고 행안부, 더구나 직제 개편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朱永順 委員**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우선 환경부부터 방향을 정리하고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신속한 추진이 되어 현장의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특히 지난 번에 여수 대림산업 사고 이후, 텍사스 비료화학 공장 사고 이후로 전 국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빨리 이것을 추진하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법안과 동시에 저희들 행정부 내의 조직도 빠른

시일 내에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 질의합니다.

○**장하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먼저 은수미 위원님이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강력한 주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있는 본회의 때 마지막 안건이 다행히도 심상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물론 회의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여야에 큰 이견이 없는 그런 결의안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기 살균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도 어떤 유해화학물질이라든가 또 그것으로 만들어진 공산품의 유통에 대해서 관리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슴기 피해자들도 정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데, 일단 이 가슴기 살균제 문제가 원론적으로 우리 정부도 일정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인식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법 제도를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법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은 관련법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정부 내에서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 총리실 주제로 이번에 관련 부처간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장하나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향후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결론을,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전에 저희들이 추진해 오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다고……

○**장하나 위원** 예전에 추진했던 프로세스가 사실 유명무실했었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복지부에서는 다행히 피해자 조사,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중단될 뻔 하던 것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맞다고 그러는……

○**장하나 위원** 지금 상황이 이분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힘든 투병생활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정부와 판매자랑 제조사 측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것을 소송 결과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구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가 가슴기 살균제라는 제품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이미 판명이 난 사실을 가지고 소송 결과를 보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가 기관에서 가슴기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에 걸렸다고 해 놓고 정부 자체도 소송 결과를 봐야지 피해자 구제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지금 현행 피해구제 법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정부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피해……

○**장하나 위원** 그러면 왜 법안을 환경부에서 준비해서 환경부안으로 내놓은 적이 없을까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화평법에 일정 부분 제품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피해구제법 저희들이 할 때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다행히 저는 오늘 본회의에서 심상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피해자 구제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내일 이렇게 안에 추경예산에, 이 결의안이 통과됐을 시 어떻게 우리 피해자들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치료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좀 도울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추경예산이 포함되었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이식 수술이라든가 중증 환자, 경증 환자에 따라

서 최소한의 보상과는 다른 치료비를 산정했더니 추경안에 한 196억 정도, 아까 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이분들을 당장의 고통에서는 좀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늘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꼭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같다’, 자기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너무 모자라고 모자란 이런 구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점이, 결의안 통과와 지금 추경예산 논의하는 시점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도 이 추경예산 196억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올 2월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2014년부터는 우리 환경부가 하천 및 호수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 방사성 폐기물 유입 여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2014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갑자기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전문 능력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경부터 좀 이 방사성 물질 조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추경을 하게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분석 장비라든가 소요될 예산을 혹시 환경부에서도 추산을 해 놓은 액수가 좀 있으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위원님께서 그때 또 반영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돼서, 당초에는 2014년부터 조사를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하반기 중에 분석 장비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52억 90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제대로 못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전 사고가 정말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호수나 하천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을 검출을 해 간 것을 중

단케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수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관리를 안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법 통과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법만 통과되고 예산이 없어서 유명무실화되고, 사실 모든 국민들이 위협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도 이 추경예산 53억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더 이상 수질 관리 안 하게 되었다는 것 너무 중요하고 환경부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합니다.

○**최봉홍 위원** 최봉홍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실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볼 때……

○**위원장 신계륜** 최 위원님,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14개 사업장에 3341억을 편성했는데 우선 하수처리장 문제, 관거 문제 그것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지금 그 예산에 942억을 증액시켰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에 수반한 지방재정 부담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3개 사업장에 현재 추경에 연관이 되는 기존 예산,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곳은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5월, 6월 추경 시에 확보, 물론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고 봅니다마도 현재 기존 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지자체 예산에서 추경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때문에 고민도 했고, 지자체 의견들도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는 지자체만 선별해서 이번 에……

○**최봉홍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형편없었거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일부는 그랬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2013년 신규내역 사업에 또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작년과 같은 집행률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한 게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 측면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방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부터 먼저 쓰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늦은 경우도 있고, 차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지방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선별을 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해체 철거 작업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현재까지 5.7% 되어 있다고 그랬고, 처리한 것도 전국에 어마어마한 동수가 있습니다만 일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저는 일자리 창출을 볼 때에는, 슬레이트 해체도 역시 자기 부담이 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추경을 가지고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환경도 좀 고쳐 주고 단시간에 슬레이트지붕이 안 보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나아진 것은 금년에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좀 올랐습니다. 30%, 40% 올라가서 자부담이 줄어들어서 집행이 좀 더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게 한다면 치더라도 슬레이트지붕은 영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오히려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지고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특수화학분석차량 구입, 금년에 본예산에 2대 들어 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것 생산하는 데 한 8개월 걸리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예년에 그렇게 좀 걸렸습니다.

○**최봉홍 위원** 특수화학분석차량 현재는 1대밖에 없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1대가 우리나라 전부를 커버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물론 특수화학차량은 사 가지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최봉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금년에 2대 하면 작년보다는 3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추가로 한다면 이게 일자리나 거기에 맞춰 가지고 플러스를 가져오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민생안정 차원에서, 워낙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처를 해서 설명을 못 해 주니까 그런 불안이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지금 본부에 있는 것 하나하고, 앞으로 2대를 사면 그 3대를 가지고 활용하더라도 한 시간 내에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구태여 빚을 내 가지고 그 차를 두 대 또 사야 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물량을 파악하기로는 공단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5대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겠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지만 이 문제는 시급성을 구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공단이 서울지역하고 울산, 여수, 대산, 이 네 군데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에서 커버를 할 거고 나머지 2대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꼭 사 가지고 한

다고 하는 것은, 각 환경 수계지역으로 하여금 환경청 하나씩 하나씩, 4대강에 하나씩 다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원래 목적보다는 구비하는 형식을 갖추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특히 예산 확보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관거사업이나 거기에 남는 예산을 바로 다른 곳에 돌려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과급성이 큰 곳에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녹조현상이 나 가지고 물이 엉망이 되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총인시설이나 총인처리비용 같은 것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수가 모자란데 오히려 그런 곳에다 좀 집어넣어 가지고 물이라도 수질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 질의합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통합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결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의 추경 편성 자체의 타당성을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편성하지만 실제로 보면 환경부도,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제시된 사업들을 보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의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다음번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다음에 또 예비비라든가 세출 조정 이런 수단으로 이걸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다면 추경 편성이 필요 없을 텐데 그 문제에서도 제가 정당성을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경기 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 편성을 합시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거기에 정말 부합하는지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연내에 이걸 다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것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

적을 하셨지만 지방비 매칭 문제로 해서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환경부에 대한 그런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출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말 이게 짜 맞추기 예산이다, 그냥 추경을 해서 시중에 국가 재정으로 돈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 맞게 그냥 어저지로 갖다가 전부 다 맞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실효성이 걱정이 되고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지방비 매칭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사업이든 그간에 몇 년 동안 제가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이것 제대로 집행된 게 없는 사업들을 다 넣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증액을 시켰는데, 과연 이게 연말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이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시다마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예산이 548억인데 351억 원이나 감액했어요, 전년도 불용처리가 많아서. 그런 예산을 197억 원을 다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집어넣어 놓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추경 편성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억지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의 어떤 실효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도대체 추경 편성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사업 이것도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몇 년째지요? 한 3년째 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3년째 했는데 한 번도 목표 달성한 적이 없어요. 80% 선에서 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다음 회계연도로 이렇게 예산을 넘기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도 또 늘렸단 말이지요.

올해는 무슨 자신이 있으십니까, 차관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올해는 국고 지원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30~40%로 올랐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더, 부담이 적으니까 집행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분야는 사실은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민생이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계획했었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부담을 20%로 줄였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홍영표 위원** 20% 줄였어도 결국은 이걸 철거하고 난 후에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시 지붕을 교체해야 되는 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런 부담도 크게 작용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30%에서 20%, 이게 지금 대체로 평균 얼마 들어갑니까, 한 가구당? 한 500만 원 들어갑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한 가구당 19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영표 위원** 전체 예산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가구당요.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평균……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30%일 경우에는 한 50만 원 하다가 한 30만 원, 20만 원 깎아 준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실제로는 교체하는 비용, 신규로 새롭게 지붕을 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안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없이……

제가 이것은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튼 환경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볼 때 너무 성의 없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성의 없이 만드셨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예결소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이종훈 위원 질의합니다.

○**이종훈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자체 부담을 포함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이미 다 지적해 주셔서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제 대체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뿐만 아니라 보통의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또 곧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심의를 할 때에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첫째로 환경부가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하고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의 효과성, 일단은 환경 개선이 제일 우선이고요. 이런 추경일 때를 대비해서, 꼭 추경이 아니라도 그렇겠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나랄지 또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층,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놓고, 얼마나 이것이 시급한지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 놓고요.

세 번째, 이것이 지자체 부담이 또 매칭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더라,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해 놓고 있으면 보통 때 예산을 배정할 때뿐만 아니라 추경할 때 그것을 중심으로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궁금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자체 나름대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처음 도입할 때든지 타당성 재조사를 할 때 그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수질 개선, 환경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하기는 합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제가 좀 아는데요, 저도 해 보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비추어서 외부에서 평가받은 것, 기재부랑 이렇게 해서 평가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한 효과 분석에 입각해서 이걸 짜셨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일부 사업들은, 재정사업에서 지적을 받고 이런 사업들은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재정당국에서 일단 삭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반영을 시키고……

○**이종훈 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받은 부분과 연관돼서 어땠는지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다음에 다음 2014년도 예산을 위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 의원실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알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두 번째로 그 사업이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또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지금 더 시급한가, 아주 절실한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미 다 파악해 놓으셨나요? 예컨대 하수관거 같은 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수질 관리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을……

○**이종훈 위원** 아니, 지금 이 액수가 어디에 얼마, 구체적으로 다 돼 있냐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구체적으로는…… 전체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쪽지예산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정부에서는 일단 계획을 잡고요, 중간에 지역에서 시급하다 해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분석이 과학적으로 돼 있고 객관적으로 돼 있으면 쪽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부처에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부처 입장에서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계획 대비해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바로, 그대로 안 가고 늦어지니까 그 늦어지는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쪽지가 들어가면 그 예산이 빨리 반영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이종훈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별로 평소……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슈퍼추경’ 할 때도 제

가 많은 걸 느꼈는데, 그 희망근로사업에서 지역별로, 인구 대비로 그냥 나누어 주고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누어 준 다음에 배분해 놓고 거기서 어느 사업에 쓸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통제도 없고 계획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내고 하계끔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전에 분석하는 것을 환경부라도 좀 제대로 해서, 그래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쓰는 부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다른 부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 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합니다.

지금 환경부장관께서는 법사위에 가 계신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지금 법사위에 저희들 법안이 많이 있고 쟁점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장관님께서 오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환노위에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은 법사위가 자구나 문구나 이런 것, 범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홍영표 소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토론 중에 한정에 위원, 김경협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김성태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 그러십니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최봉홍 위원, 주영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도……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도 있습니까? 장하나 위원도 추가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부터는 실무 준비할 때 서면질의를 잘 준비해서 착오 없게 하세요. 장하나 위원은 이미 제출했는데 지금 안 올라 왔어요. 이런 것 실수 없게 하세요. 장하나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위원회 회의록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 본회의인데요, 지금 오후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위원 1시 반 쯤……

○위원장 신계륜 1시 반이면…… 2시가 본회의고, 우리가 2시에 의총이 있나요?

○이종훈 위원 새누리당은 2시에 의총이 있는데……

○위원장 신계륜 전부 2시에 의총이지요?

○홍영표 위원 지금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신계륜 지금 밥을 먹어야지요.

○이완영 위원 1시에 합시다.

○위원장 신계륜 1시 반에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사위로 몇 시쯤 내려가시면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3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질의에 답변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먼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엔화 약세 등으로 경제여건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상황의 경우 3월 취업자 수가 23만 9000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0.3%p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총 33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청장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참여자 1000명, 중소기업 창작인턴 1000명, 사회공헌 일자리 2000명 등 청장년층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1만 명 확대하고 동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상담원 40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청년층의 해외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해외 일자리 통합 시스템(K-Move 포털) 구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고용노동부

축 등 관련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제안드리는 추가경정예산 외에 정부 내부 절차를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총 1256억 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 기금예산을 활용하여 여성·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 분야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신속한 지원효과와 원활한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 관리로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이 다소나마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옥 차관입니다.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홍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신기창 인력수급정책국장입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임서정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노길준 고용서비스정책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명로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직무대리입니다. 지금 법사위에 참석중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시민석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김재훈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도.

○위원장 신계륜 예.

○홍영표 위원 민주당통합당 간사 홍영표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것은 좀 상황이 긴급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 또 고용노동부의 많은 법안들이 지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현재 법사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환경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안 그리고 화학물질 평가법 관련 이것도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야당 위원들이 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고용노동부 관련해서도 현재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좀 경제단체의 반대가 있고 이래서 이 법을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관님이 곧 법사위 내려가시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바로 가실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3시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제가 긴급히 의사진행을 발언을 드리는데, 우선은 정년 60세 연장, 정년연장 의무화 이 법안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상임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토론했고 또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 변화가 있으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여야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특히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 더군다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굉장히 어려운 토론과정 또 조정과정을 거쳐서 의결한 안에 대해서 법사

위가 시비를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라든지 자구라든지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법사위의 주어진 권한이지 전문성도 없고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손대기 시작하면 정말 상임위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계에서 우리 환노위를 포함한 국회에서 심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고 로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둘러 가지고 우리가 입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연장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장관께서는 확실한 입장을 법사위에 가서 밝히시고 그것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저도 새누리당 간사로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법제화의 시급성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장관부장관님, 정년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또 국정과제 사항인 게 틀림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정년연장법의 환노위 통과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전체 근로자들의 80%, 대체근로자까지 포함하면 90%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번 여야 간에 정년연장을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합의한 것은 약 800만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조기퇴직, 그로 인한 고령화 시대의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위원회의 이런 입법권 침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행위로든지 그게 허용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령화 촉진법 제19조2항에 명시된 '임금체계 개

편 등'이 임금조정을 포함한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의 동의를 법안을 논의할 때 분명하게 받았습니까. 이것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겼습니까.

그래서 이 임금피크제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의 공감을 이끌어 냈고, 또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법사위에 그냥 계류를 시킨다든지 또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한마디로 국회법상의 소관 상임위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희 새누리당 측면에서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런 결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법사위의, 특히 정년연장 60세 관련 법안을 포함한 많은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의 심의 내용을 존중해서 그대로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틀림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법사위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원칙과 내용들을 존중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일간에 경제5단체 주장은 지금 상당히,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청년 실업이 더 가중되고 계층 간의 갈등마저 야기시키는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고령화 시대의 정년연장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지난 대선공약을 지키고 또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이것은 차질 없이 가야 된다는 이런 명확한 소신을 장관께서 앞으로 계속 견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저도 잠시 전에 박영선 법사위원장한테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존중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지만 장관께서도 분명하게 위원회의 분위기를, 그리고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잘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심경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의 편성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장관님 제안설명 시에 언급된 것으로 같음을 하고 하단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청년과 장년 등에 대한 직접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강화해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5쪽, 추가경정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총 336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의 한 1.7% 수준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7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 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53억을 증액해서 동 사업의 참여자 수를 한 1000명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에도 9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창직인턴에 대한 지원 인원을 1000명 정도 늘리고 지원 기간도 6개월 정도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 인력에 대한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에도 4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을 2000명 추가로 늘리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제공 사업 이외에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통합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35억 증액해서 지원 인원을 현재 12만에서 13만 명으로 1만 명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상담원을 400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패키지 참여자들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지원을 위해서 16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입니다.

50억 원을 증액해서 해외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스펙초월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K-Move센터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8페이지는 약 1256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동일한 취지하여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가 편성한 335억 8900만 원의 추경 규모는 일자리 창출의 주관 부처임을 고려할 때 정부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본예산의 실행행렬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편성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을 효율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중에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내역사업에 포함된 현지 박람회 등의 사업은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있는 만큼 동 예산이 행사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목표인원 1만 명 확대에 따른 훈련수당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3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이 사업의 참여 실적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의 집행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치하게 추계하여 적정의 추경편성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중 창직인턴 사업이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사업과 중복성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창직자에 대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마케팅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이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구조화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용평등실현사업 중에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는 추경안의 2000명 증원까지 포함하면 총 목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있는바 목표인원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정할 필요가 있고 참여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다양한 분야의 발굴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고했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2시 반에 예정되어 있어서 다소 시간상 무리입니다.

추경편성 자체가 무리여서 이렇게 무리한 시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전 시간에 7분의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7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7분의 시간 이내에서라도 짧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오전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애 위원 질의합니다.

○한정애 위원 추경안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35억 원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 2012년에도 331억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신 것 알지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면 이것은 뭐, 지금 환노위 자체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게 결국은 작년과 비슷한 또 하나의 불용 예산, 불용 예산이 예상되는데 거기다 또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뻔하게 불용이 될 줄 알면서 지금 예산을 다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만 나와 있지 없는 상태입니다.

장관님 이게 꼭 추경편성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우리가 정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꼭 긴요하고 즉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불용이 있었지만 최근에 취업성공패키지Ⅱ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청장년층들의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13년부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Ⅱ를 통해서 정말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정애 위원 계획은 참 좋으신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잡아야 될 방향을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추경안에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투입할 40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6개월짜리.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도 사실은 직업 상담을 하고 계신 분 중에 기간제가 상당히 많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사실 박근혜정부가 공언했던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오간 데가 없고 또 다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추경을 편성하고 그를 통해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취업 성공을 제대로 이룩하게 하기 위한……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용지원센터에 사람이 부족해서 장애인고용공단 안에 있는 상담원까지 데려다가 상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이, 전국에 고용지원센터보다 센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적은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빼 가면,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은 자기 실적도 제대로 못 채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직업 상담을 맞춤형, 맞춤형이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전화 통화해 가지고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상담이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담원들을 대거 정규화하고 그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해 주고 열정적으로 취업패키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만들어 주셔야 하지만 길게 보면 고용률 70%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상담을 해 주는 분들의 여건 자체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뭐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상담을 해 주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그리고 특히나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말로 맞춤형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고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쓴 상태의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조금씩 더 하겠다, 이것을 더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이만큼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직업상담 인력들의 고용 안정 그다음에 전문성 제고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신분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추경에 의해서 임시로 이제 400명이 긴급한, 조속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해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 상담 관련한 인력이 조금 이쪽으로 편중돼서 장애인 관련 상담 서비스가 만약에 조금 저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즉시 제가 한번 살펴해보도록 하겠고, 제 생각에는 2013년 사업들이 2014년에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 특성상 400명 상담원들은 경험이 쌓이면 또 소중한

인적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안정된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고용노동부가 조금 모범적인 상황으로, 자꾸만 단시간 근로라든지 또는 기간제를 양산하는 방식이 아닌 지금 있는 기간제나 또는 무기계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 그들에 대한 일자리 또는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그분들이 정말 자부심 있게 제대로 된 직업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업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이나 인프라가 확대되는 걸 제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필요한 겁니다. 고용률 70%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지 않고 맞춰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큰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인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인력은 이 정부에서라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 70% 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은 큰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인력들은 반드시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에서는 직제하고 예산의 제한을 항상 받으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충당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민 위원 질의합니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추경편성 방향을 보니까 방향은 아주 잘 훌륭하게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을 향한 미스매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짜 주신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가 K-Move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우리 고용노동부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점들을 제가 제시를 하고 얘기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혀 어떤 진전과 변화가 없어요.

포털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지금 얼마가 추경예산이 된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40억 정도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견적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군데에서만 견적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 군데에서만 들어왔다고. 하늘연소프트라고 견적이 51억 들어왔어요. ‘왜 이것을 하는데 견적을 한 군데에서만 받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랬더니 두 군데를 더 해 가지고 왔는데 한 군데는 59억, 한 군데는 55억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분명히 제가 견적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의원실에서 뽑은 견적이 37억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준비되는 과정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K-Move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청년들이 취업해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사례들과 실질적인 사례들을 만드는 게 주안점인데, 이것은 무슨 뭐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40억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좋은, 양질의 해외 일자리 정보를 만드는 일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그냥 한 1500cc, 2000cc 차가 가면 되는데 에쿠스 풀옵션으로 뽑아 가지고 필요도 안 한 것, 인테리어만 잔뜩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책이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K-Move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해외 취업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양질의 해외 취업의 일자리도 없는데 이것 포털 구축해서 뭐 할 거예요?

아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이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아니, 해외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10만 개 이렇게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300개든…… 아

니,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 우리 고용노동부나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이 각 주요 나라에 가서서 그래서 양질의 거기의 중견이든 중소기업이든 좋은 기업들, 취업할 만한 것들을 현장에서 3주든 2주든 한 달이든 머물면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100개에서 300개 정도 나오게 해서 그곳 가는 비용, 그 정보를 가져오는 비용들, 알아내는 비용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KOTRA·KOICA 영망진창이에요, 정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쓸데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실효성이. 이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이게 가능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 무슨 내용으로 포털 40억 쓰고…… 아니, 해외 취업에 갈 만한 장소, 청년의 눈높이 속에서…… 또 그리고 많은 취업자들이 가고 싶지도 않은 내용들 잔뜩 올려놓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것 국민들이 볼 때, 또 많은 위원님들이 볼 때 이 40억 포털에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게다가 월드잡 같은 경우는 ISP 수립을 해서 여기에 꼼꼼하게 뭐가 들어가는지 다 계획한 이후에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계획도 하나도 안 짰고, 그냥 넘죽 40억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오늘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아니, 이제 새 정부 출범하셨으면 일 잘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고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해 드리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효적으로 좀 짜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해 보세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포털 구축 관련해 가지고는 예상액과다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김상민 위원 이게요 문제가 많아요. 이것 월드잡 한 팀에서 오는 것인데 이렇게 비싸게 올리고 말이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다음에 포털 구축의 내용 관련해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제

가 알기로는 청년특위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K-Move 포털 예산……

○김상민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김상민 위원 청년특위 위원장 제가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현재, 최근의 청년특위 관련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상민 위원 이것 재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포털 구축이 아니라 정확하고, 이 많은 청년들이나 또는 해외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해외에 무슨 일자리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국민들이, 청년들이? 그것을 정부에서 부처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 몇 개나 됩니까? 한 1000개 아니면 500개 그 정도만 해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를, 사례를 잘 만들면 포털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좋은 양질의 정보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정말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는 데 비용을 많이 좀 들이십시오, 그래야지 아니까. 그러한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면 아니,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시스템이 더 크게, 1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지원하면 그때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검토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 이사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 무슨 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편성을 다른 식으로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좋은 외국에 있는 취업정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을 수집하고 모으고 그럴 수 있는 과정에 돈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박람회 같은 것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 할 돈 있으면 몇 명이라도 파견을 더 많이 보내서 다른 나라에서 좋은 양질의 취업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출장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거기 갈 때 공무원만 가지 마시고 대학생들이든 취업준비생이든 그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 뽑으셔서 그래서 함께 가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방송으로 제작을 하시든 다큐멘터리로 만드시든 거기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성공한 사례들이 보여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지원하고 양질에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생길 텐데요. 그때 가면 포털이고 뭐고 시스템이고, 10만 명 지원하면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 K-Move 사업을 하는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은 저희 부도 정확하게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K-Move 포털 관련해서 사업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내용 부분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 위원님께서 한번 심의를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여기 여야 위원님들도 청년들 더 좋은 자리에 가서 더 글로벌 진출하는 데 반대할 위원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포털에 40억 쓴다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환노위 차원에서 마음껏 예산이 편성되면 도와드리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지, K-Move 자체가 필요 없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가게 차리는 데, 인테리어 하는 데 한 10억 전체 예산에서 8억 쓰고 2억은 어디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는 데 쓰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음식점이 잘 되겠습니까, 홍보지도 제대로 안 붙이고 광고도 안 하는데요? 인테리어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오지도 않는 손님 앞두고 그냥 10만 명 올 손님 앞두고 인테리어 한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포털 구축 관련해서 이게 사업의,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더라도 그 내용·효과면의 문제 제기라고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상민 위원 이렇게 예산을 쓰기 시작하면, K-Move라는 정책이 마치 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처럼 비쳐지고도 있는데, 이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이 정책이 실패하는 정책이 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확실하게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제가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자, 유념했으면 됐습니다.

심상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경기도 고양 덕양갑 심상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엉터리 추경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한 티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장두노미(藏頭露尾)’식 추경이에요. 그것 아시죠, 장두노미란 말씀 아시지요? 쫓기던 타조가 급한 나머지 덩굴 속에 머리만 숨긴 채 꼬리만 내놓는 그런 추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분야인데, 이 일자리 분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이것은 추경의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예산에 추가해서 시급하고 중대한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기존 사업, 전부 기존 사업에 의례적으로 확대한 추가 예산 편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불법 추경이에요,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잘하시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지만 이런 식의 엉터리 부실 추경은 절대 야당이 협력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요, 이번에 일자리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4236억인데 17조 3000억 중에서 5.8%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 최소 1120억에 이릅니다. 이게 뺄튀기 추경이지 뭐니까? 고용률 70%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낮 뜨거운 그런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이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보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놓으신 안 중에 양질의 일자리 어디 있어요? 하루에 2만 4000원 주는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이

것 추가로 2000명 늘리겠다 했는데, 이것 한 달 꼬박 일해도 7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또 청년인턴 1000명 늘리자고 92억 증액했는데, 이것 단기 일자리 맞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심상정 위원** 추경안 중에서 제가 볼 때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빼고는 도대체 다 단기 저임금 일자리예요. 그런데 왜 방향을 이렇게 쓰십니까, 사실과 다르게? 말 따로 실천 따로, 국민들만 헛갈리게.

그다음에 경기침체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추경편성안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양 효과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1000명 창직인턴 확대, 이게 지금 즉각적인 고용 창출 목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장관께서 업무보고 때 강조를 하셨듯이 70% 고용률 하려면 여성고용 부문, 여성고용 일자리 늘리시겠다 했는데 이번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성일자리는?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 이것을, 작년에 집행실적이 절반도 못 미치는 사업을 그것을 지금 목표도 과도하게 설정해 놓고 또 1만 명 추가로 잡고……

과연 여기 환경노동위원들을 필로 아시는 겁니까, 지금? 아까 이것은 한정에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장관께서 되짚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K-Move 사업—우리 김상민 위원 잘 지적을 했는데요—종합포털사이트 만드는 데 31억을 증액, 이게 도대체 경기침체·대량 실업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사업도 마찬가지로요, K-Move 사업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그런 일자리가 질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것 뭐 알려진 것 있어요? 보고하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건대, 우선 첫째 시급하고 중대한 그런 창출효과를 내는 사업이 도대체 이 가운데 뭘지, 다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올해 내놓은 사업에 추가로 보완해서 지금 낸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추경입니까,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질의 고용서비스 어느

거예요, 도대체? 그것 말씀해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경기침체에 부응한 그런 진작효과가 있는, 당장에…… 그게 됩니까? 어떤 사업이, 어떤 예산이 거기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으로 70%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찬찬히 점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급조해 가지고 전혀 실효성도 없는 것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국민 예산 쓰는 것은 절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번 추경의 취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결위에서도 그런 취지의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사항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 부문의 추경예산은 정말 시급하고 중대한 방법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고용서비스하고 직업훈련에 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충분히 사업들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용 부문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은 전체 통으로 제안이 되어서 그 안에 고용노동 추경예산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 부문에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들,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관이라든지 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으로 공공 부문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 고용 부문의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부분은 작년에도 사실은 인원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행부 차원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실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400명 부분은 불요불급하고 정말 시급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말 전문화된, 안정화된 직업상담 인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고용부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상정 위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전 부처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준비 정도나 또 스케줄에 따라서 소신 있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화뇌동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출한 안 중에 직업상담사 채용 문제를 빼고는, 그것도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금 근로감독관을 늘린다든지 또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확대한다든지 비정규직 문제를 전환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갖고 오시면 여기서 급하게 안 갖고 왔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잘하기를, 제대로 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 직전에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것이 추경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 질의합니다.

○이완영 위원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 들어가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추경에 고민을 했는가, 제가 우리 환노위 여야 위원님들께 정말 안 들었으면 하는 말이 ‘노동부 공무원들 왜 이러냐?’ 그 말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특히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동부 출신이라서.

저는 대통령이 봤으면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DJ 정부 때 28조 중에 4조 원이 넘는 돈이 일자리 예산이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예산 하면서 17조에 336억이 일자리다, 누가 일자리 때문에 추경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규모도 규모지만 내용적으로 정말 새로운 게 있는가,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

장관님 이 추경안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한테 언제쯤 한번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완영 위원 기획관리실장 나와 보세요.

언제 '추경을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짭니다'라고 최소한 여당 위원님한테라도 언제쯤 알려줬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정협의 때입니까?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심경우 예, 기초실장입니다.

지난주 당정협의 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때 설명드린 것……

○이완영 위원 당정협의가 처음이지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심경우 그리고 여야 보좌관들께도 한번씩 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들어가세요.

저는 지금 여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것을 추경에 넣었으면 좋겠다 한번 의견을 듣고 반영해 봐도 이것보다는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처음 해 보는데 이 과정 관리를 전체적으로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완영 위원 정말 저는 박근혜정부 첫 해에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얼마나 화려하게, 내용도 알차게 잘했는데 거기 있는 것 새로운 것 하나 못 넣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추경예산은 약 330억 정도 됩니다마는 기금예산 또 저희들이 추가 편성해서 1250억 정도 일자리 관련해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분위기 아시지요? 노동부 것 지금 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 들으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들은 바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보고도 제대로 안 하네. 분위기 파악도 못 하고 있구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만큼 여야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이 많다는 거지요.

상담원, 제가 장관님 인사청문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제가 수석전문위원 할 때 박근혜 예산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예산 올렸어요. 그것을 왜 직접 한다고 해서 상담원 채

용하고, 제가 하지 마시라고, 일자리 민간 취업을…… 기관을 활용하면 민간 취업해서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상담원 채용해서, 그게 제대로 된 일자리입니까? 금년에 또 원래 본예산에서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해요. 제대로 지금 결원도 못 채우는 것 아니잖아요.

여성 일자리, 제가 예결 위원이라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 일자리, 어디가 핵심이냐? 저는 자영업자 대책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영업자가 평균 28~30%입니다, 우리 취업자 중에. 이게 이미 폐업하고 워킹푸어 되고…… 누가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까? 여성입니다, 여성. 가족종사자며 여성입니다.

폐업하면 아무 정부 대책 없고, 저소득 폐업, 지나친 자영업…… 그러면 빨리 우리가 훈련을 시켜 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게 한 꼭지 들어가면 얼마나 빛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그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본예산에 어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영세 자영업자들, 한계 자영업자들 임금근로자로……

○이완영 위원 얼마입니까, 본예산 얼마입니까? 담당국장!

국장도 모르는 것을 지금 장관님이 그냥 답변을 하시네요.

국장 모르면 과장이라도 하세요. 얼마입니까, 금년 본예산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확한 액수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예산……

○이완영 위원 제 말씀은, 지금 편성된 것도 다 추가잖아요. 특히 한계 자영업자 문제는 훨씬 더 많이…… 여성 일자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야 위원들이? 훨씬 더 공감받을 거라고요.

K-Move 김상민 위원이, 저도 이 문제 엄청 깊이 있게 MB정권 때 10만 양병설인가 했지 않습니까? 새로 똑딱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K-Move, 이름만 바뀌었지. 그러면 지금 핵심이 뭐냐, 지금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5년 동안 해 온 해외 취업 그것도 새로 구축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해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아까 KOICA 쓸모없다 하지만 KOICA,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대기업의 주재원, 특히 한 상 외교를 저는 엄청 들었습니다. 우리 동포들, 동포들만 해도 우리 한국사람 쓸 사람들 엄청 많다. 그런 것을 제대로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일자리 하나 소개하면 돈을 주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인적자원 여기 있으면 뭐 합니까? 엑기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상담원 채용도 마찬가지고요. 상담원 채용 아무 자격 없는 사람 채용합니까? 왜 민간에서 다 키워 놓은 사람 스카우트 해 가지고 데리고 갑니까? 그런 불평 모르시지요, 장관님? 들어 봤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민간 직업상담사 인력들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미 민간 취업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갔습니다. 또 여러분 채용하면 그 사람들 또 채용해 가요. 왜 그 사람들 일하려고 해 가지고 시스템 해 놓은 것 노동부에서 왜 일자리 뺏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고해 보실 겁니까, 상담원 채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민간 직업상담사 시장이 생각보다 꽤 넓어서 공공 부분……

○이완영 위원 천만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없도록……

○이완영 위원 지금 공간도 없어요, 청에. 400명 하는데 공간 예산은 없잖아요?

○위원장 신계륜 고용노동부장관님, 이완영 위원님 지적한 것 추후에 조사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조직 확대 관련해서 공간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절대, 다시 추가채용 예산 말고 민간기관에 어떻게 줘 가지고 활성화할 것인지 고려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이번에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지금 2시 반에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공식 확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위원—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이 앉아 계셔서 질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정회를 했다가 정회가, 만약 본회의가 일과시간 안에 끝나면 오늘 회의를 속개하겠고 만약 일과시간 뒤로 끝나면 다른 날짜를 잡아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은수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은수미입니다.

작년 국회 때 이미 MB정부 5년간의 노동시장 정책,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들이 상당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우리 고용시장이 완전히 체력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은 늘지만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그래서 가계는 어렵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체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직접 일자리, 그러니까 재정일자리 이런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아주 심각하게 우리 고용시장의 체력을 지금 고갈시키고 있다 이런 의견도 이미 제출이 됐는데 저는 이번 추경이 그러한 기준은, 국회에서의 공감대나 논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점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OECD하고 좀 비교를 해 드리면 적극적 노동시장, 그러니까 고용정책의 총지출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67.3%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12.5%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비

중이 OECD 평균의 5.4배예요.

반면에 인프라와 관련된 고용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2.7%로 OECD 평균보다 10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없이 직접일자리만 창출하고,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도 한국이 17.2%인데 OECD 평균 28.5%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시기가 바로 고용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체력을 증진시켜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 데 집중을 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많은, OECD 평균 5.4배나 되는 직접 일자리 창출을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으로 들고 들어오셨어요. 이걸 가지고 국회가 납득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합의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저희들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회에서 이미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된 내용을 무시하는 상황의 추경안을 제출하셨는지 전 궁금하고, 그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본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추진 방안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 고용정책들은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보다는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하고 또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에 더 투자를 하고, 노동시장의 고용체질 자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예산의 기본적인 기초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즉시성이 있고 또 급한 예산 부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 현재 기금에서 저희들이 부처의 계획에 따라서 1250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예산 부분들을 편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을 유념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그것도 답변이 안 되는 게 아까 신계륜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재정법 89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경기 침체가 이런 우려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체력 고갈 때문에 대량실업이라든가 혹은 잠재적 실업이지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미 꾸준히 얘기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내수가 취약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안 여는 거고 그래서 체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입각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돼야지요. 지금도 많은 직접 일자리 비중을 왜 또 더 늘리십니까? 제가 그게…… 그건 답변이 안 되고요.

거기다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30·40대 일자리는 제대로 안 늘고 50대, 60대 이상의 일자리만 는다,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미 2010년이나 그 이후 자료를 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의 평균연령이, 직접 일자리 창출 재정을 투자했을 때 그때 대상이 되는 평균 연령이 56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50~60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회에 긴급히 추가경정으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통과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관님도 취성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취성패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그냥 직업 알선이나 취업 알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장관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공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거기에 일자리 안정책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간제 400명 정도라면, 제가 유일하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게 가져오신 추경예산안 중에서 그 정도인데 이것조차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취성패를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거기다가 취성패Ⅱ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용부에 있으신 분들 다 아십니다. 이것을 또 늘리겠다고 가져와 버리시면 저희들이 동의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합니다.

○최봉홍 위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금년 노동부 추경예산이 336억, 7개 사업장으로 7개 사업으로 해 냈는데 추경을 통한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가지고

경기둔화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사업 자체가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 때마다 문제점이 지적됐던 사업으로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추경을 편성한 게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만 대안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은 그 목적에 부합이 될지 안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336억밖에 안 되는 추경예산을 7개 사업으로 쪼개 가지고 쓴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특히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336억 되는 돈을 7개 사업에 쪼개지 말고 오히려 집중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는 예결산소위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안으로서 일단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가지고 내일 회의하실 때는 좀 집중적으로 336억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장하나 위원 질의합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장의 어떤 민생경제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경기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소관 상임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 추경예산이 3340억쯤 되고요, 노동부 추경예산이 330억이지요, 10분의 1이지요. 일자리 창출한다는 추경 전체 목적하고 이 비율이, 말도 안 되는 비율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장하나 위원** 이 추경예산 가지고 국민 여러분

들께 일자리 창출하겠다, 민생경제 안정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추경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이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기금예산……

○**장하나 위원** 이번 추경예산의 목적을 한정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그러니까 얘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장하나 위원** 노동부장관으로서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추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 아니, 이번 추경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 일단 박근혜정부에서의 국정과제로서도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고 또 노동부가 좀 책임 있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330억 가지고, 지금 17조 중에 330여 억 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경기침체,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납득이 너무 안 되고요.

각각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국회 때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이미 본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의견이 전문위원 의견서부터 또 여야 위원님들이 뜻을 모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반영이 안 될 것을 떠나서 그냥 국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아예 추경예산에 각각 사업예산을 늘리자고 해 버리면 과연 환노위에서 국회와 노동부가 협업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쇠귀에 경 읽기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K-Move 사업 같은 것,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젊은이들이? 글로벌 취업사업이 외국에 나가서 기존의 어떤 일자리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뭐 말은 IT, 2류 업계 얘기하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78%가 사무·서비스 직종인데 세분화해서 보면 거의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Move가 뭐가 달라졌나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지금 포털로 새로 만든다고 해 놔는데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사무·서비스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자리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평가 같은 것을 좀 하고 이 K-Move 시작을 하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K-Move는 기존에 글로벌 취업 관련해서 실패의 경험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의 다변화 부분도 K-Move 사업의 방향 전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330억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내놓기에는 조금 약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면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지금 2015년까지 계획을 받고 있는데 아마 다 취합이 되면 추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정말 이번 추경이 정부가 얘기한 대로 그런 취지를 좀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약속해 놓은 것부터 약속을 지켜 가는 데 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노동부 추경 330억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국민한테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노동부장관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Move 사업에 대해서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주관 부처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돼 있고 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생길 청년특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전달체계 부분은 기존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고용노동부가……

○**장하나 위원** 노동부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면 청년위원회가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주관은 어떤 의미에서 주관이라고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같이 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청년위원회와 협업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청년위원회는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청년위원회는 이 K-Move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청년 그리고 청년위원회의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장하나 위원**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노동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글로벌인턴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글로벌인턴십을 여러 부처에서 보내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합쳐서 1만 2000명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위원회가 주무 부처를 맡는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간의 일을 관장하는 게 청년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청년위원회는 주무 부처가 될 수가 없고요, 주무 부처는 고용부입니다. 그리고 고용부가 일을 추진할 때 청년위원회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장하나 위원** 아이디어만 가져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아이디어하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라든지 또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청년들이 실제로 나가서 해외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연구용역을 좀 맡겨서 장관님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포털을 만드는 데 41억을 쓴다 이렇게 추경은 나왔는데 이래서 어떻게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는 고용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자료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장관님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찾으면 좋은 일자리가 찾아질 것이라고 본다는

게 과연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이 자리에 앉은 위원님들과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인지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Move 포털 부분도 아까 실제적으로 구축이라든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할 거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할 위원님들이 없어서……

○**김성태 위원** 저는 있는데 서면으로 다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마 너무 촉박한데다가 자료 전달도 늦고 추경의 의미도 많이 퇴색된 상황이어서 무척 난감한 상황이 많았습니다만 여야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의견을 잘 정리해서 심사소위에서 잘 정리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잘 감안해서 올바른 추경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 서용교 위원, 주영순 위원, 김경협 위원, 장하나 위원, 한명숙 위원, 한정에 위원, 최봉홍 위원, 은수미 위원, 홍영표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른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차	관 관	윤 정 이	성 연 재	규 만 현
기 획 조 정 실 장		환 경 정 책 실 장	백 이 호	규 석 중
환 경 정 책 관 직 무 대 리		환 경 보 건 정 책 관	나 정 균	광 회 희
기 후 대 기 정 책 관		물 환 경 정 책 국 장	남 오 김	광 종 배
상 하 수 도 정 책 관		자 연 보 전 국 장	김 이 박	상 찬 회
자 원 순 환 국 장				석 광 석

고용노동부

장 차	관 관	방 정 심	하 현 재	남 옥 우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용 정 책 실 장	이 권 영	홍 순 정
노 동 정 책 실 장		노 동 시 장 정 책 관	임 나 영	서 영 돈
직 업 능 령 정 책 관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노 길 기	준 창
직 무 대 리		인 력 수 급 정 책 국 장	신 이 명	이 로
고 령 사 회 인 령 심 의 관 직 무 대 리		근 로 개 선 정 책 관	임 박 시	무 화 석
노 사 협 령 정 책 관		공 공 노 사 정 책 관	박 시 박	민 종 길
산 재 예 방 보 상 정 책 국 장		정 책 기 획 관	김 재	재 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3. 4. 9 주호영 · 강은희 · 고희선 · 권은희 ·

김장실 · 김재원 · 김희국 · 서용교 · 심학봉 · 안홍준 · 유기준 · 이우현 · 이재영 · 이한성 · 조명철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 발의)

(2013. 4. 9 최봉홍 · 이만우 · 정희수 · 이한성 · 김세연 · 이윤석 · 한기호 · 김성태 · 김상민 · 김을동 · 윤명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0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1 전정희 · 이윤석 · 이찬열 · 윤관석 · 최민희 · 김성주 · 박수현 · 이원욱 · 유은혜 · 이인영 · 노영민 · 노용래 · 김춘진 · 홍의락 · 조정태 · 최원식 · 김승남 · 김재운 · 이상민 · 김상희 · 전순옥 · 김윤덕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1 심상정 · 홍영표 · 강동원 · 한명숙 · 김경협 · 은수미 · 정진후 · 서기호 · 장하나 · 김제남 · 박수현 · 윤후덕 · 이명수 · 주영순 · 이윤석 · 이종훈 · 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2일 회부됨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6 장하나 · 김광진 · 김우남 · 김제남 · 김춘진 · 김태년 · 남인순 · 배기운 · 심상정 · 유성엽 · 윤관석 · 전순옥 · 정성호 · 한명숙 · 홍종학 의원 발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6 장하나 · 김재운 · 김제남 · 남인순 · 배기운 · 심상정 · 유성엽 · 윤관석 · 이원욱 · 전순옥 · 정성호 · 홍영표 · 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7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6 이명수 · 손인춘 · 이현승 · 이노근 · 이장우 · 박상은 · 안효대 · 강석호 · 함진규 · 이이재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6 박주선 · 김동철 · 홍종학 · 안민석 · 이석기 · 장병완 · 전병헌 · 추미애 · 박홍근 · 노영민 · 이상규 · 윤관석 · 김광진 의원 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 4. 18 정부 제출)

이상 3건 4월 18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8 정희수 · 황영철 · 한기호 · 김성찬 · 이학재 · 이명수 · 이한성 · 윤명희 · 최봉홍 · 주영순 · 조명철 의원 발의)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8 김기현 · 서용교 · 이현재 · 이학재 · 이만우 · 정희수 · 유승우 · 김태원 · 이한성 · 한선교 · 조명철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8 김상훈 · 현영희 · 심학봉 · 이채익 · 이우현 · 유승우 · 김성태 · 이낙연 · 정희수 · 권은희 · 박민식 · 여상규 · 김세연 · 이한성 · 조명철 · 이만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9일 회부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9 주영순 · 서용교 · 류지영 · 이학재 · 이만우 · 이한성 · 유승우 · 한선교 · 정희수 · 박대동 · 김성태 · 김태원 · 정우택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9 심재권 · 최재성 · 배기운 · 김태년 · 조명철 · 정진후 · 이상직 · 강동원 · 박민수 · 홍종학 · 안홍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2일 회부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2 김성태 · 안홍준 · 이완영 · 황영철 · 서용교 · 유승우 · 주영순 · 권성동 · 최봉홍 · 김기선 의원 발의)

4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4. 17 김상희 · 박홍근 · 박수현 · 이미경 · 김영주 · 우원식 · 남인순 · 장하나 · 김현미 · 유기홍 의원 발의)

4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4. 18 이낙연 · 김태원 · 김승남 · 윤관석 ·
김성곤 · 강동원 · 문정림 · 박인숙 · 이한성 ·
정진후 의원 발의)

4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